

KNSI REPORT

컨퍼런스

<제24회 코리아포럼(5회전문가좌담회) 녹취록>

□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양방문 평가와 전망 □

일시: 2009년 8월 5일(월) 17:30-19:30 / 장소: 코리아연구원

- ▶ 사회: 박순성(코리아연구원 연구기획위원장, 동국대 교수)
- ▶ 토론: 서재정(존스홉킨스대 교수)
정창현(민족21 주간)
- 주최: 코리아연구원, 한겨레신문

KNSI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Korea National Strategy Institute

※코리아연구원은 회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회비 및 기부금으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부문에서 정책대안 및 국가전략을 제시합니다. 전화(02-733-3348)나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후원 및 회원등록이 가능하며,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순성(사회자) : 오늘 코리아연구원과 한겨레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코리아연구원 제5차 좌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정-정창현 두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북한방문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북미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러한 북미관계 개선이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한 한국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정세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두 분이 모두 8월 말 혹은 9월에 북미관계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최근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기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클린턴의 방북 배경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재정 : 최근 인터뷰나 글에서 미국이 북과 대화와 협상을 하려하고, 외교적인 관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해왔다. 또, 북미관계 전환의 조짐이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미국 측에서 현직관료는 아니지만 전직관료 중 최고위급 인사라고 할 수 있는 클린턴 전 대통령을 보낸 것이나, 보내는 시점 면에서도 매우 빠르게 행동한 것은 예측을 넘어서는 조치였다. 오바마 정부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북한 역시 이러한 상황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아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북미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개이며, 당초 예상보다 더 강하고 빠르게 북미관계가 진전될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정창현 :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북한은 2000년의 북미공동선언 당시의 합의 수준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오바마 정부 등장 이후 빌 클린턴의 방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이를 결국 미국이 수용했다는 것은, 현재의 오바마 정부도 2000년의 논의(포괄적·통합적 접근)에 기초한 방향으로 논의의 수준을 결정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는 북한의 ‘이미지 정치’ 측면에서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9년 만에 방북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북한의 주민들에게 내부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주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또한 북쪽 표현으로 오바마 행정부 들어 대미용으로 뽑은 칼을 6월 이후 집어넣을 계기와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클린턴 방북으로 북의 입장에서선 편하게 정책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서재정 : 그런 계기가 북한뿐 만 아니라 미국에도 주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클린턴’ 방북의 상징적인 의미를 2000년 북미공동성명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한다. 2000년의 북미공동성명은 양쪽이 상호 주권을 인정하고, 평등한 관계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정치적으로 과거의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러한 북-미-미-성명을 만든 클린턴이 방북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정신과 합의에 기초해 북-미-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따라서 북-미-관계가 정치적-관계의 정상화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것이 북한에 주는 상징적 의미라면, 미국에 주는 의미도 있다. 미국은 제재와 압박에서 대화로 전환하고 싶어 하는 국면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기회와 명분’을 포착하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6자회담을 계속 유도했는데 그것이 어려워졌고, 당장 공식적인 회담을 하기엔 부담스러우니까 ‘클린턴’이라는 전직 대통령을 보냄으로써 북-미 간 양자 공식대화라는 형식은 피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 직접 협상을 하고 싶어 한 것인데,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함으로써 내용적인 면에서 실리를 챙길 수 있었기 때문에 형식을 두고 미국과 북한의 부조화를 절묘하게 돌파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의미가 있다.

박순성 : 두 분의 말씀은 북한의 대미정책·미국의 대북정책의 전환이 시작되었거나, 또는 최소한 변화

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입장인 것 같다. 그렇다면 북한의 대미정책 과거 기조는 및 앞으로의 변화, 그리고 미국의 대북정책의 과거 기조 및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한 번 더 정리해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면, 미국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그 뒤에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북한의 변화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태도가 바뀐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질 수 있고, 그럴 경우 미국 내부의 강경파들과 한국과 일본이라는 동맹국에 입장 변화를 설명하고, 설득 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기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관련하여 논리와 구성의 변화를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다. 또한, 북한의 경우에도 1월부터 ‘미국이 북한에 대해 체제를 인정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과 핵 포기를 맞교환할 것’을 내세워왔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 개선이 된 이후에만 핵을 포기하고 핵 포기와 관련해서는 핵군축 협상의 형식이 될 것’이라는 제안을 내놓고, 그동안 실제로는 두 번째 방식으로 미국을 압박하여 온 것처럼 보였다. 그렇다면, 지금은 북한의 대미기조가 변화한 것으로 봐야하는 것인가? 이러한 측면에서 북·미의 상대국에 대한 정책기조 변화의 논리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

서재정 : 미국 내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우선 오바마 행정부 초기의 대북정책은 ‘제재와 압박을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라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특히,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오바마 행정부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싱크탱크의 학자들도 매우 격앙된 분위기에서 ‘북핵문제는 대화와 협상으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 ‘현재의 북한은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북한이 핵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핵을 보유하려고 한다.’ 등의 인식이 팽배했다. 따라서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나온 것이 중국을 동원한 제재와 압박이었다. 이것은 과거에도 시도가 있었으나, 중국이 협조하지 않아서 실패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북에 대해 제대로 제재와 압박을 가하려면 중국을 동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왔던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제재·압박 정책이 실행되는 데에는 정부 밖의 헨리 키신저(Henry Alfred Kissinger)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실 키신저는 부시정부 말기에 대북정책이 대화와 협상으로 돌아서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다. 부시 행정부가 강경책을 쓰다 나중에 6자회담으로 돌아서고 9·19공동성명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이 키신저가 북한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북의 핵실험 뒤에 키신저의 입장이 돌아섰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까지 했으니 강하게 압박해야 하며,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중국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이 설사 붕괴해도, 후에 들어설 정권이나 그 이후 상황이 중국에 불리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면, 중국이 제재와 압박에 동참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전략을 오바마 정부 선두에서 집행하려 했던 것이 미국 내 중국통인 국무부의 고위 관리였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의 초기 대북정책은 정부 밖에서는 키신저가, 정부 안에서는 이 고위 관리가 주도하는 모습을 띠었고, 그 뒤에는 정부 내의 비확산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북핵문제를 담당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북정책은 내용적으로 사실상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외부적으로는 중국이 동의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미국이 기업 3개와 민간인 3인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것이나, 최근에 중국이 북한에 바나듐을 못 들어가게 했다는 사실 등은 미국의 대북 제재·압박 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보이는 듯이 비춰졌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중국이 거절을 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북한의 붕괴에 대비해 미국이 중국에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중국은 그런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그리고 미·중·일 3자회의를 하려했으나, 북한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그 자체가 결렬되었고, 지난 7월 27,28일 열린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도 미국이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강력하게 노력했으나, 결국 중국이 이를 거부 했다.

미-중 전략 경제대화의 공동선언문은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위해 미-중이 협조 하면서, 동시에 북핵 문제의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병렬 표기가 되어있다. 이처럼 중국과 미국의 이견 차이는 해소되지 않았고, 전략대화가 끝난 직후 중국의 왕광야 외교부 수석 부부장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핵문제가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같이 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번 회의에서 양자가 각자 입장을 병행하는 것으로 봉합이 됐지만,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미국이 중국에 설득된 것 아니냐,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중 일 3자회담과 미-중 전략대화를 거치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설득해 압박과 제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 따라서 압박과 제재라는 트랙이 현실성을 잃었고, 그와 동시에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던 다른 쪽 라인이 힘을 얻게 된 것이며, 이쪽에선 압박과 제재 조치는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leverage)로 필요한 것이지만 압박과 제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는데, 중국의 ‘관리장성’에 압박론이 제동이 걸리면서 대화와 협상론에 힘이 실리게 됐고, 이것이 결국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창현 : 북한은 오바마가 당선된 직후에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초반에 북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러냈다고 보여진다. 첫 번째로, 1월에 미국 민간대표단이 북한에 들어가고, 2월에 리언 시걸 등의 전문가들이 북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미 북한이 생각하는 전체적인 구상이 미국에 전달됐다고 본다. 예를 들어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핵군축 협상이 되어야 하고, 그때까지 북한은 인도의 ‘NPT체제 밖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을 얘기한 것 같다.

두 번째는,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전달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을 것 같다. 2월에 북-미 간 접촉이 여러 차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북쪽에선 기대한 것 같다.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동남아시아 순방 때 여러 차례, 특히 일본을 거쳐 서울 기자회견에서 대북 강경 발언이 나왔다. 이런 부분이 오바마 행정부 초창기에 미국의 협상 의지 여부에 대해 북한의 생각이 변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선 관계정상화를 통해 핵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비친 것 같다. 그런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의 입장은 여전히 오바마 행정부와 협상의 여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2월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북미 관계정상화에 대한 언급에서 나타난다. 당시 우리 신문엔 북이 선 관계정상화, 후 비핵화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 되었지만, 북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선 후’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관계의 정상화의 중점이 ‘핵 포기’이며, 다만 그 과정이 복잡하고, 북미 상호간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쌓는 과정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인공위성 발사를 놓고 초기엔 미국에서 자주권(자위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막상 위성을 쏘았을 때 미-중의 강경한 반응과 한-미 합동군사훈련 등이 이어지면서, 3월 이후에는 북 스스로(북에 있는 사람들조차 느끼듯)도 2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다. 그 과정이 지난 후에 5월부터 북-미간에 대화가 시작되고 일정한 접근이 시도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잘 안되면서 핵실험까지 갔다. 그러나 6월부터 북이 내부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와 다시 접촉한다는 입장이 정해지면서, 외무성으로 대미 외교권한이 많이 이양되었고, 지금 대화국면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의 기본 입장은 과거에 2000년 북미공동성명, 2003년 북일 평양선언, 2005년 6자회담 내에서 9·19공동선언 등 남·북, 북·미, 북·일 관계에 일정한 합의들이 있었다. 물론 외부에서는 북이 합의를 지키지 않

왔기 때문에 이행이 안됐다고 얘기하는데, 북의 입장에선 그런 합의들이 상대국에서 (합의의 선결조치 등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상대국의 정권교체로 기존의 합의들이 사문화됐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번 북-미관계에서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빠른 시일 내에 오바마 행정부와 대화의 의제와 방식을 확정하고, 북-미 관계를 일정하게 불가역적인 방향으로 확정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북은 미국에 불가역적인 해결방식,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관계정상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 두 부분이 서로 보완된다면 북의 입장에선 ‘폭넓게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미국 측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순성 : 1월부터 진행된 과정을 보면,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힘겨루기가 벌어졌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협상과 대화, 제재와 압박, 군사적 행동) 중에서 미국은 ‘제재와 압박’을 선택했지만 실패했다. 북한의 강한 버티기와 중국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결정적으로 미국의 전략을 실패하게 만든 것 같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미국 최고 정책결정자, 즉 오바마 대통령의 실수가 있었다. 7~8개월 동안의 북미 간 힘겨루기에서 북한이 거둔 ‘승리’가 북-미 협상에서 북한에 유리한 지위를 줄 것이고, 그것이 북한이 미국에 대해 더 강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북-미간 힘겨루기 과정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못한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았거나, 기대가 잘못 전달됐었거나, 과거에 북-미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아가 메시지의 창조적 재해석을 통한 ‘통역자’의 역할을 해 온 중국·한국 등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경제위기 때문에 미·중 사이에도 다른 주요한 현안이 있었고, 중국도 북한의 강경한 행동 때문에 망설임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 북미 간 메시지의 전달과 상호 기대 문제를 여전히 잘 조절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이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세 번째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오바마 취임 이후 북한의 기대는 2000년 10월 북-미 공동코뮤니케로 되돌아가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얘기 하셨는데, 그것은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미사일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포괄적·통합적이면서 동시적인 해결 방식이었다. 그런데 정창현 선생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2000년 10월의 북미 공동코뮤니케에서 나온 수준보다 북한이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북한이 한 것이 아닌가 싶다. 북한은 관계정상화 후 비핵화(핵군축이 아니라)나, 동시해결의 원칙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미국에 알려진 것은 관계정상화 후 핵군축 협상 형태의 비핵화였고, 이는 2000년 10월의 합의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요구였기 때문에 미국도 북의 요구에 대해서 쉽게 결정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비핵화를 통한 관계정상화’나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동시적’ 의미로 서로 볼 수 있겠지만, 북한이 강하게 주장해왔던 관계정상화 후 핵군축-비핵화를 철회하고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나 비핵화를 통한 관계정상화라고 하는 2000년 10월의 북미 공동커뮤니케의 수준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리하자면, 협상 진행 과정 중의 북미 간 힘겨루기에서 북한이 유리한 입장인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미국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향후 북-미 협상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앞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실질적인 협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를 해보았으면 한다.

서재정 : 첫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는 상관관계가 있어 뒤에 묶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두 번째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종의 인식의 갭(대북인식, 북한 이

해의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든다. 예를 들어 보즈워스가 대북 특사의 자격으로 한국과 중국을 방문했을 때, ‘방북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에 미사일 발사 유예를 요청했는데, 저는 보즈워스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북한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왜 그 시점에 했는지 잘 이해할 수 없었다. 만일 보즈워스나 (보즈워스가 아니더라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라인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라면 아마 다르게 대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시 북의 미확인 물체 발사에 대해, 데니스 블레어가 청문회에서 ‘우주발사체(Space Launch Vehicle)’라고 규정을 했는데, 보즈워스는 굳이 미사일이라 규정하면서, 북에 대해 ‘쏘지말라’고까지 했다. 그런데 북한은 내부 동력으로 볼 때,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밖에 없는 과정에 있었다고 본다. 지금에 와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지만, 그 당시 최고인민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서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재임명되고, 국방위의 권한도 강화됐다. 따라서 국방위 성과로써 인공위성 발사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고, 그것으로 최고인민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내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문을 열겠다’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4월부터 150일 전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과거와 같이 단순한 노동력의 투입이 아니라 이번에는 과학기술의 투입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 중심의 150일 전투를 위해서도 상징적인 전기가 필요했었고, 이런 측면에서 인공위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즉, 과학기술을 집대성한 인공위성을 발사함으로써 (옛날식으로 사람들을 모아 땅만 파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로 강성대국의 문을 열자’는 것이었고, 이는 경제적인 이유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경제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발사하지 말라고 해도 북한은 이미 발사하는 과정 중에 있었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보즈워스와 클린턴 장관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미사일’이라고 부르면서 발사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보이는 것이다. 또한 밑에서(오바마 정부의 전문가 그룹 등) 제대로 북한의 동향을 파악해서 정보를 올려주지 못했고, 그것이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난 결과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을 때, 미국 스스로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스스로 자기의 발을 묶어버린 우를 범했다. 그 과정에서 퍼셉션 갭(이해·인식의 문제/perception gap)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정부의 역할도 엄밀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에서는 (미사일에 대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내부적인 정권 불안감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 하면서, 협상이 불필요하다거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를 계속 유포했다. 오히려 한국정부가 북의 내부 동력을 이해시키고 지금 시점에서 미사일이라고 규정하는 것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아무 언급 없이, 대화와 협상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면 미국의 대응도 달라졌을 것인데, 한국 정부에서는 그 반대의 정책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정부의 행동은 오바마 행정부의 퍼셉션 갭(perception gap)을 좁혀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넓게 만든 부분이 있다.

정창현 :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속전속결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왔는데, 아마도 지난해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있었던 것 같다. 대체로 보면 9~10월경이라고 보는데, 그 기간에 북한의 후계자 문제, 2012년 경제구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북-미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이런 문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중심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의 문제들은 내부에서 이미 결정이 됐고, 그에 기초하여 오바마 정부가 등장하자마자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제의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오판을 했다면, 오바마 정부가 핵 없는 세상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나,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다. 그 기대가 초창기에 북미간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함으로써 북이 급속하게 강경한 입장으로 변화하였고, 미국은 대북 정책라인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이 상당히 곤란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보면, 북한은 오판에 따라 강경하게 갔다가

지금은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오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고, 현재 북한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장기적이고 다양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다.

박순성 : 논의를 좀 더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 다른 질문을 하겠다. 북-미 관계에서 지난 몇 개월은 작년부터 진행되어왔고, 각자 국가전략의 측면에서 (북미관계 해결에 대한) 갖고 있던 기본 구상들을 수정·변화 시키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일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어 갈 것인지에 대해 몇 가지 전망을 해보자면, 이는 9·19공동성명의 방식(포괄적이지만 단계적이고 행동 대 행동이라는 아주 점진적인 방식)과 2000년 북미 공동커뮤니케의 방식(포괄적이면서 통합적이면서도 급진적인 방식)이라는 두 가지 해법(모양)의 비교를 통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예측해 볼 수도 있다. 이는 관계정상화와 비핵화의 관계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 협상의 방식에 있어서는 6자회담과 양자대화의 문제일 수도 있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북미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서재정 : 2000년 북-미 공동성명은 과거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정치적 의지를 천명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9·19 공동성명은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적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것. 곧, 북-미 관계정상화·비핵화·평화체제 등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지금까지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과정은 단계적이지만, 2단계까지는 정치적인 의제는 건드리지 못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매몰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이쪽에서 중유를 몇 톤 보내면, 북은 원자로의 어느 부분을 동결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단계에서는 정치적인 의제를 직접적·전면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2000년 공동성명에서 천명했던 적대관계 청산이라든지, 9·19 공동성명에서 좀 더 구체화되었던 정치적 의제들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점이 왔고, (대화가 어떤 형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북-미 대화가 이뤄진다면, 이런 정치적 의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이미 기술적인 부분은 할 만큼 했고, 현재 북한이 2단계 마지막 부분을 되돌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라고 본다. 사실 이보다 더 큰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북쪽에서도 적대관계 청산, 관계정상화, 평화체제를 전면적으로 들고 나와서 북한식 표현으로 통 큰 타협을 보려고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여기서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 그리고 미사일 문제 등의 선·후 관계가 협상의 난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선·후의 문제’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도 북한도 각자가 원하는 단계와 순서가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북-미 관계에서는 (상호 신뢰가 부재하기 때문에)상대방의 것을 먼저 들어주고 내 것은 나중에 주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방식이다.

따라서 포괄적인 동시 해결, 즉 동시 행동의 원칙이 되살아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생각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핵실험도 두 번이나 했고,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우라늄 농축까지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나름대로 협상의 레버리지를 더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마도 한반도 평화체제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한다. 관계 정상화가 단순히 정상이 만나서 관계를 정상화 한다는 선언적인 수준이 아니라, 한반도의 정전상태를 어떤 식으로든 끝내고, 주한미군 문제 및 종전의 문제까지 포함하는 평화체제의 문제가 의제로 올라와야 정치적 타결을 하겠다고 할 것이라는 것이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관계정상화+평화체제의 대응 조치로서 북한은 지금까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 온 플루토늄과 핵, 그리고 미사일 등의 포기를 들고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정창현 : 지금 보면 관계정상화와 비핵화의 문제인데, 2000년 공동선언은 북-미 간 관계정상화의 측면

이 강하고, 9·19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합의로 두 협상의 결과는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은 북-미 공동선언에 기초한 북-미 관계 정상화 프로세스와 9·19 공동성명에 기초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 직접 협상’과 미국이 얘기하는 ‘6자회담 내에서의 양자대화’를 절충하려면, 6자회담 내의 소그룹들(지금은 거의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을 격상시키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미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북·미간의 군사적인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한다. 평화협정을 논의할 때도 유엔군합동사령부 주한미군 문제 등은 미국이 어떤 식이든 결정을 내려야 협의가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6자회담은 후속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나 검증 등에 있어 실무적인 얘기들이 중심적인 논의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북-미간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북미 공동커뮤니케와 9·19공동성명에 기초해서, 관계정상화는 관계정상화 문제대로 북미 간 계속 회담을 해나가고, 그에 맞춰서 6자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대응 조치들을 통해 보조를 맞추는 방식으로 두 부분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북-미 간 일정한 접점이 만들어지고 관계정상화와 비핵화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본다.

박순성 :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2000년 10월 북-미 공동선언은 관계정상화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사고 프레임이다. 9·19 공동성명은 비핵화를 통한 관계정상화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평화체제 문제, 경제협력 문제 등 더 확장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북한이 원하는 것은 2000년 북미 공동커뮤니케의 방식이고, 미국은 여전히 9·19 공동성명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북미 간 입장의 차이가 어느 점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지, 또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그 과정이나 결과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를 예상을 해보면 좋겠다. 과연 협상에서 누가 더 강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정창현 : 지금은 북한이 협상력을 많이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것이겠지만, 1차적으로는 비확산이다. 핵물질의 추가적인 생산과 다른 나라로의 이전의 문제,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의 개발 등이 미국 입장에서 1차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정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북한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앞서서도 이야기 했듯이, 두 축을 동시에 진행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하나는 북-미 관계정상화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인 ‘신뢰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신뢰 속에서 양자 간 관계정상화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어떻게 밟아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또 다른 하나로써 비핵화 문제에서는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했다는 조건에서, 어느 시점에 핵을 포기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즉, 핵무기를 최종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제거할 것인지의 문제다. 결국 북·미 관계정상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프로세스의 접점, 다시 말해 최종 단계는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북-미관계정상화 프로세스의 어느 지점과 연결시킬 것인지’가 가장 큰 난제로 등장할 것이다.

서재정 : 그 난제의 과정 이전에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협상 방식이 굉장히 기술적이라는 점이다. 북한에서는 정치적 의제를 먼저 내세우는, 다시 말해서 원칙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해결하자고 하는 방식이라면, 미국의 협상방식은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항에서 출발해서 조금씩 큰 의제로 옮겨가는 방식이다. 이러한 외교적 협상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가 상이한 접근 방식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합의점을 만들어낼 것이냐가 큰 과제이다. 북한은 플루토늄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등으로 나름의 협상력을 높인다는 것이고, 미국은 제재와 금융봉쇄 등이 대화와 협상 국면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협상 자체를 깰 수도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매몰되어 협상 자체를 깨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평

장히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북-미 협상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커다란 정치적인 의제와 아주 세밀한 기술적인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난제로 등장할 것이다.

박순성 :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은 어떤 의미에서 실무적인 협의가 끝난 뒤에 이뤄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7월 초에 미국이 먼저 기자 문제에 대해 사과 하고, 북한이 그 대가로 기사를 풀어 준 후, 향후 북-미간 협상을 해나간다는 정도로 볼 수 있겠다. 여기서 협상을 해나가는 과정 방식 협상의 목표 등에 대한 합의가 이미 있었을 것으로 예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협상을 한다’는 것만 결정이 되었으며 협상의 범위는 열려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만약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미관계 정상화나 비핵화 문제에 대해 북미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면, 관계정상화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준비한 실무자 차원의 합의수준은 어느 정도였을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정창현 : 원래 북한이 생각했던 구상은 오바마 행정부가 등장하자마자 고위급 특사를 상호 주고 받아, 2000년 북미 공동선언의 정신을 확인하고 그 수준에서 다시 대화와 협상을 하자는 형식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다. 만일 오바마 정부가 여기에 응한다면 이른바 모든 의제들을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빅딜을 하는 방법으로 북한은 생각했던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번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고위급 특사 교환을 할 수 있는 교두보, ‘사실상의 특사교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북의 보도에서 북-미간 현안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했고, 대화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견해의 일치를 봤다고 얘기했다. 지금 미국 내에서 대북 메시지를 보냈다, 안보냈다 하는 논란은 국내 정치용이다. 북한이 이렇게 말 할 정도라면, 북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클린턴을 통해 솔직하게 미국 측에 다 전달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풀어 보면, ‘공식적인 대변인 성명 등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핵을 포기할 의사가 분명히 있고, 대신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써 2000년에 논의한(북미 공동선언에서 보면 회담의 형식은 양자 또는 다자간 다양한 형태의 협의를 해나가자고 규정되어 있다.) 수준으로 협상을 한다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라는 것이다. 그리고 ‘9·19 공동성명에서 확인된 것이 상호존중인데, 왜 미국은 우리 체제를 붕괴시키려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자위권에 대해 뭐라 하느냐, 우리는 체제인정과 상호존중, 그리고 자위권이 인정된다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논의를 빨리 진행시키고, 적절한 시점에 오바마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초청의사를 덧붙여 전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것이 북한의 협상 방식이다.

박순성 :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2000년 10월 북미 공동커뮤니케에 기초한 협상의 방식과 관계정상화를 통해 비핵화로 가는 북한의 입장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또한 9·19 공동성명의 2단계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수준의 의제로 뛰어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서재정 : 미국 측 입장에서는 관계정상화가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비핵화다. 일단 비확산이 선결과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전략과제는 비핵화다. 이를 통해 내년 5월로 예정된 NPT회의에서 비확산체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미국의 전략인 것이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나 오바마 행정부나, 탈냉전 시기에 핵확산은 미국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차이가 있는 부분은 부시는 힘(선제공격)을 사용해서라도 핵확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고, 오바마 행정부는 다자적 방식 즉, NPT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최우선 과제가 비확산 체제의 확장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북핵 문제를 최단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지금 당장 회담이 시작되어도 내년 5월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엔 딱딱한 일정이며,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 세부적인 문제, 예를 들어 2단

계의 검증 문제 등에 묶여서 연말 혹은, 내년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좀 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해주고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타결로 가는 것이 자신들의 전략적인 목표와 부합된다고 판단할 것이라 생각된다.

박순성 : 정리해보면, 실무 차원에서는 (지난 8개월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협상력을 높이려는 관성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높은 수준의 정치적 타결을 통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새로운 수준의 북-미 관계정상화 과정으로 전환 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다. 향후 전개과정을 보자면, 결국 북-미가 새로운 협상의 단계로 들어가면서 이러한 정세변화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국가는 남한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중국은 이번에 미국의 태도 변화에 큰 역할을 했지만 북핵문제를 북-미간 양자회담을 통해 해결해나간다면,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한반도가 안정되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이지만 북-미 관계 개선이 중국의 예상과 통제범위를 뛰어넘었을 때 갖는 불안감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중국의 전략적 역할과 고민은 무엇일까?

아울러 한국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명박 정부는 북한 정권의 권력 교체나 북한 체제의 위기에 대한 기대감에 사로잡혀서(이는 선입견 혹은 주관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런 역할도 못한 것 같다. 더욱이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오바마 행정부가 빠른 속도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했다고 본다. 보즈워스나 미국의 실무자들의 방한 당시 청와대나 외교통상부에서 다양한 형태로 미국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한국의 선입견이나 주관적 판단이 앞으로 미국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한국은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중국의 전략과 필요하다면 일본의 입장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서재정 :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가 정확한 정세 분석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일단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에서도 나타나지만, 미국은 굉장히 빠르게 행동했고, 굉장히 고위급이 움직였다. 물론, 한국 정부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겠지만, 거의 마지막 순간에 ‘통보’ 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 생각되고, 현재 북미사이의 급격한 변화는 미국 측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는 명분이 사실상 유엔 안보리 결의안인데, 사실 이 결의안에 앞장섰던 국가가 6자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었다. 북한은 이 안보리결의안 통과를 북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6자회담은 물 건너갔다고 이야기 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클린턴 국무 장관의 기자회견에서 북의 주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듯 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것으로 북한이 클린턴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 또한 중국은 공산당 선전담당이 방문단을 끌고 북한에 갔으며, 러시아에서도 고위관리가 평양에 벌써 갔다 왔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당 대 당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 북한이 갖고 있던 섭섭함이나 주권 침해의식 등을 이미 무마해줬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소 정권에서 굉장히 앞장섰던 것이다. 일본은 남북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20만톤 중유제공을 할 수 없다고 했고, 6자회담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현재 일본의 국내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자민당이 민주당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은 (자민당에 비해)남북자 문제에서 더 자유롭고 북한과 관계개선에서도 훨씬 적극적인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다. 또 한편으로 민주당의 주류세력이 다나카파인데, 다나카는 예전에 중국과 관계 개선에서도 앞장섰던 사람이고, 북과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 또한, 전 사회당의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에 있는데 이들도 대북 관계 개선에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일본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면 현재는, 미·일·러 중이 모두 북과 적극적인 교류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국면으로 접어드는 대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유독 한국정부만 전혀 교류와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 정부가 5자회담(협의)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거꾸로 한국을 뺀 5자 협의가 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남북관계 건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정창현 : 북미 간 대화로 갈 경우, 외교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이다. 현재 중단되어있는 IAEA 검증요원이 북한에 다시 들어간다는지 하는 북한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며, 북이 몇 개의 이벤트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조선국립교향악단이 뉴욕에 가서 공연하는 프로젝트도 살아있는 측면이 있고, 2002년 10월(켈리 차관보가 가서 깨지기는 했지만,)에 북한은 북-미 관계가 일정하게 대화국면으로 가면, 미국과 적대적이 아니라 협력하며 살 의사가 있다는 측면에서 푸에블로호를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했다. 이것은 사실상 북미관계의 진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은 이런 측면(이벤트)에 능하기 때문에, 대화의 고리가 마련되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북-미간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일본과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고, 지금까지 과정이 대부분 그래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대북 특사를 좀 늦게 보냈으면 좋겠다고 한다든지, 북측 내부의 정세를 미국에 전달하면서 미국의 대북 인식에 혼돈을 주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이 변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정책 입안자들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북정책에 있어 좌우를 굉장히 왔다갔다할 것이다. 북-미 관계개선 과정에서 대화를 하다보면 결렬이 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는데, 결렬이 되면 한쪽으로 쏠리고 대화를 다시 하면 다른 쪽으로 확 쏠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보다 세밀하게 대북 정책을 짜고, 예를 들자면 8·15기념사에서 대북 정책에 대해 현재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파격적인 제안을 해야지만, 변화하는 북-미 관계 속에서 한국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박순성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어떤 제안을 내놓는 게 좋겠는지.

정창현 :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간접대화를 통해 현대아산 직원 0씨 문제에 대해 남북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현 정부에 북한과의 협상 방법을 터득하고 익숙해지는 과정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현재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10·4 선언 중에서 실제로 추진 가능한 것을 북측에 제안하고,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기념사 등을 통해서 말로만 했었고, 한 번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 적이 없다. 정식으로 10·4선언을 이행할 생각이 있고,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자고 북측에 보다 구체적인 제안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박순성 :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에 호응하면 북-미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거나, 또는 상대국의 제스처에 대한 기대 수준이 맞지 않아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일본이나 한국의 보수정권이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에 발목을 잡아서 문제해결이 잘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상황은 미국의 대북접근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발목잡기는 끝났다고 판단된다. 두 분께서 한국 정부에 제언을 하고 싶은 것이나 미국 북한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을 간단하게 얘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서재정 : 일단, 한국 정부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는 동의를 한다. 그렇지만 북한의 특성상 원칙에 대한 천명이 있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측에서 6·15와 10·4 선언에 대한 확실한 언명이 나와야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도 북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위나 표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두 선언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입장이 개진돼야 한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에 제언을 한다면, 현재는 양국이 모두 거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기회이다. 미국은 내년 5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하고, 북한도 2012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국이 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상대국에 대해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에 확실한 성과를 이뤄서 한반도와 아시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만들어내겠다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정창현 : 2000년에 들어와서 북의 대남·대외정책은 ‘통미통남’ 즉,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병행 발전이라는 확고한 원칙이 있었다고 본다. 북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도 6·15와 10·4 이행할 의지만 있다면 대화와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었다. 비록 이명박 정부 이후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남북 간 대화 없이 닫혀있는데, 북한의 이러한 기조가 북·미관계에서 대화가 시작되면, 남북관계에서도 대화를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 즉, 북미, 남북 간 관계의 병행 발전이 북·미 관계를 진전시키는데 보다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통미통남’의 정책을 이번 기회에 북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보았을 때, 가치의 문제를 풀기위해 낮은 차원의 인도적 문제, 이산가족상봉 등을 통해 계기를 만들고, 그 계기를 통해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철도 연결 사업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박순성 : 한반도 정세가 평화적인 방향으로 정착되는 데 두 분의 제언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두 분 말씀 중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평화적으로 될 수밖에 없으며, 북·미 간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 역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이다. 따라서 불가피한 미래를 자꾸 피하지 말고, 미·남·북의 지도부가 잘 헤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국전쟁의 경험이라든지, 거의 20년 동안 북한 핵을 둘러싼 협상이나 긴장은 전쟁이나, 압박과 제재를 통해 한반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수사적이라 생각하지만, ‘필연적’이라는 측면에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다. 과거 2000년 초반의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면, 남·북→북·미→북·일 순으로 관계가 개선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이번에는 북미관계가 먼저 개선되고, 북·일→남·북 순으로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북미관계 개선가능성이 높을 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끝으로 개성공단이 아직 문을 닫지 않고 진행되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올 가을에는 금강산에 다시 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 금강산관광을 빨리 재개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현대아산의 지원, 국민적 호응도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인도적 측면에서는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끝>

